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51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 의 자 : 김문수 · 허영 · 고민정  
박지원 · 장종태 · 이광희  
정일영 · 임광현 · 김운  
안태준 · 허성무 · 이재관  
의원(12인)

###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안 제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 분석·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의 발굴·지원, 고독사의 현황 파악과 예방·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과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층·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에 대한 교육
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0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와 공개,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 분석과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민관협력)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9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이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